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충격과 한일 경제관계의 전망

정진성

1. 2개의 리스크

한일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적어도 한국 측에는 늘 무겁고 예민한 주제인 만큼, 한일 양국 관계를 논할 때의 단골 테마였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진부한 주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5년 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해서 한일 양측 연구자의 합동연구로서 기획되어 출판된 『한일관계사 1965~2015』 3권 중의 제2권인 『경제』에서 한일 경제관계의 제측면을 망라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¹

우선, 『경제』가 다룬 문제 중에서 현 시점의 한일 경제관계에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진성(丁振聲)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역서로는 『일본경영사: 일본형기업경영의 발전-에도에서 현재까지』(한울, 2001)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重要産業統制法下における石炭独占組織の市場統制政策」(『社会経済史学』 59卷 4号, 1993), 「高度經濟成長期の石炭産業調整政策: 生産維持と雇用調整を中心に」(『社会経済史学』 72卷 2号, 2006), 「재벌비판을 통해 본 일본의 반기업 정서」(『日本研究論叢』 제 27호, 2008) 등이 있다.

1 김도형·아베 마코토 외, 『한일관계사 1965~2015 II경제』, 역사공간, 2015. 이 책의 구성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한일 경제관계 50년의 궤적, 무역·투자, 금융, 산업·기술, 인적교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첫째, 한일 경제관계는 무역 면에서 보나 투자 면에서 보나 2000년대에 들어와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는 양국 관계의 역사적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마찰과 더불어 양국 간 분업구조의 변화, 즉, 한일 경제관계가 수직적 분업체제에서 수평적 분업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변화가 있다.

셋째, 수평적 분업체제로의 이행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양국 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편입되는 과정과 함께 일어났다. 이것은 양국의 경제관계가 양국만의 관계로 완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넷째,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바이며 양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의 이러한 분석은 2020년 시점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경제』가 출판된 지 5년이 지난 2020년 시점에서 한일 경제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이 2019년 7월 1일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으로 몇몇 전략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실행했다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이다(이하 이 조치를 단순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약기함).²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왔으며 한국 정부의 보복적 대일정책 및 민간에서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 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점은 한일 양국 간에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갈등으로, 그것도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종래의 한일 관계에서 가까스로 지켜져 왔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2015년 시점에서 『경제』의 집필자는 “2012년 이후 양국 간에 정치적 마찰이 예상외로 심화되면서 이제 경제관계 자체에 부담을”³ 줌에 따라 양국 경제주체의 리스크관리가 한층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면서, 바람직한 한일

2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본 특집의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람.

3 『한일관계사 1965~2015 II 경제』, 14쪽.

관계 구축의 방편으로서 정치문제와 경제문제의 분리를 주창했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2019년 단행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경제관계에서 정치적 리스크의 현재화(懸在化)가 가능성이 아닌 상수(常數)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시점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새로운 상황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후퇴(slobalization 또는 deglobalization)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후퇴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후 관찰되고 있으나, 미국의 트럼프 정권 등장에 따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추진 및 미중 갈등의 고조 등으로 더욱 진전되었다. 더구나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기존의 전 세계적인 분업구조를 교란시킴으로써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후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함께 형성되어 온 GVC의 교란 리스크가 부각되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후퇴에 따른 리스크는 비단 한일 양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모두 이에 대한 대비로 기존의 GVC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2020년 시점에서 한일 경제관계가 직면하는 최대의 문제는, 2개의 리스크, 즉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의 격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후퇴라는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 2개의 리스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행 속에 점차 수평적인 분업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관계에 제동을 걸 것이다. 이것이 급제동이 될지, 부드러운 감속이 될지는 향후 양국의 리스크 관리에 달려 있다.

2. 특집의 내용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번 『일본비평』 제24호에는 한일 경제관계에 관한 일곱 편의 논문을 실었다. 다만 이번 특집 기획의 직접적 계기가 일본의 수출규제이었기 때문에, 논문들의 주된 관심이 수출규제의 내용이나 영향에 집중되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나 코로나 팬데믹 등에 의한 글로벌

벌라이제이션의 후퇴가 한일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리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일곱 편의 논문 중 다섯 편의 논문은 산업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살폈는데, 이 중 네 편은 개별 산업—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관광산업—에서의 한일 관계를 다루고 있고, 다른 한 편은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분업구조 속에서의 한일 산업연관을 분석하고 있다. 나머지 두 편의 논문은 각각 통상정책 측면에서의 한일 관계와 ‘국산화’ 개념의 분석을 통해 한일 기술교류 내지는 기술자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무역 및 투자 등의 거시경제적 관점이나 금융 면에서의 분석은 특집에서 다루지 못했다. 이것은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상 한일 경제관계 전반에 대해 망라적으로 논문을 수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 특집이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실시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편집진이 산업면에서의 한일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개별 산업을 분석한 논문 중 김양희 논문은 2019년 7월 실행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수출규제가 취해졌을 때 한국인으로서 가장 궁금한 점의 하나는 규제에 의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내지는 한국경제가 어떤 타격을 입을까 하는 점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점에 대해 수출규제의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양국 기업 간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양국 기업과 정부가 규제의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 기업은 ‘탈동조화’로 대응하였는데, 그 실상은 ‘탈일본기업화’가 아닌 ‘탈일본화’였다. 즉 일본 기업과의 분업관계 단절이 아니라 한국 또는 제3국의 일본 법인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기업 간 관계로 볼 때,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기업 사이의 기업 간 관계는 계속된 것이다.

양국 기업 간 상호의존성의 존재로 인하여 정치적인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파국적인 결과를 신중히 피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출규제에 의해 양국이 일정한 코스트를 치

르지 않을 수 없었음은 중요하다. 한국 기업은 일정 기간 전략품목의 조달에 곤란을 겪었으며, 조달선의 변경에 비용을 지불했다. 한국 기업의 수요에 의존하던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의 조달선 변경으로 큰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보복적 경제정책으로 비화하여 경제 면에서의 GVC를 교란시킴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킨 선례가 되었다.

자동차산업에서의 한일 양국의 기업관계를 다룬 여인만 논문은 협조보다 경쟁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었는데, 김양희 논문이 반도체산업에서의 한일 양국 간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과 대비된다. 저자에 따르면, 한일 자동차기업의 관계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2000년대에 들어 상승함에 따라,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관계에서 양자의 전면적 경쟁관계로 전환되었다. 숙련절약적 관리, 자동화, 모듈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기업 특유의 생산방식의 정립이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향후의 한일 자동차기업의 관계에서도 CASE나 MaaS로 말해지는 자동차산업의 혁명적 변화가 점점 현실화하면서, 협력보다 경쟁적 측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았으나, 이 부문에서의 한일 간 협력은 현재도 활발하며, 최근의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그 협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동차산업에서의 한일 관계는 양국의 경쟁력이 거의 대등한 관계에 이르렀을 때의 한 유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여인만 논문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의 해명에 중점을 두었기에, 경쟁단계에서의 한일 관계의 구체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저자는 앞으로의 자동차산업구조가 종래 자동차산업 부문으로 생각되던 분야만이 아니라, 컴퓨터, 배터리, 카메라, 정보처리 시스템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기업 간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단계에서 한일 관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저자의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한다.

아베 마코토의 논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철강산업에서도 현재 한일 양국의 기업은 자동차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산업도 초기에는 자금이나 기술 면에서 모두 일본에 압도적으로 의존하였다. 한국 최초의 종합제철소로 설립된 포항제철(포스코)이 한일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자금과 신일철의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철강기업은 일본 철강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오히려 일본 철강기업과 경쟁관계에 서기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철강산업에서의 한일 기업관계는 1980년대부터 협력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일시적으로 협력관계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2000년대 말부터 한국 기업이 자동차강판 등의 고급강 중심의 사업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경쟁관계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철강산업의 급속한 확대에 한일 양국이 직면하면서 새로운 한일 기업 간의 제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아베 논문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원론적 질문은 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1970년대의 한일 기업 간 밀접한 협력관계는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도적 의존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198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개시된 경쟁은 한국 기업의 일본에 대한 기술적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전제로 한다. 양국 기업의 협력에서 경쟁관계로의 전환은, 그 배후에 한국 기업이 의존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중복된다. 그렇다면 과거의 협력이 실은 기술력의 격차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것이었다면, 기술력에서 대등한 단계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협력은 무엇에 기초해서 가능한 것인가? 아베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명시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저자는 한일 제휴 가능성의 근거로 과거의 협력 경험의 공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양국 기업 간의 불신감도 뿌리깊은 만큼 과거의 협력 경험이 앞으로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자산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아베 논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일 철강기업 간의 경쟁격화가 한국 철강기업과 일본 자동차기업 간의 거래 확대와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산업에서 한일 관계의 소원화 및 경쟁격화

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한일 경제 관계의 긴밀화와 연결되고 있다.

앞의 논문들이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한일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데 비해, 조아라 논문은 관광부문에서의 한일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 관광부문에서의 한일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 것은, 이 부문이 대표적인 인적 교류의 측면을 보여 준다는 점과 함께 최근 산업으로서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최근의 한일 관광객의 증감 상황, 관광 행태, 그리고 관광객 감소가 양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계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관광부문에서의 한일 관계의 변화 모습에서 제조업에서의 한일 관계의 변화 모습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견됨은 흥미롭다. 우선 관광업에서도 한국 관광업의 일본 관광객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서 오히려 일본 관광업의 한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이 더 부각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한일 관광교류에서 호스트(host)와 게스트(guest) 관계의 역전]. 제조업에서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 의존에서 ‘자립’, ‘경쟁’의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조업 부문에서의 한일 관계를 동아시아 전체의 가치사슬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관광 교류도 양국을 넘어서는 다국 간의 관계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일 관광업의 성장과 상호 관계의 변화 때문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야기한 한국 관광객 감소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관광업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한국의 관광 기업은 베트남과 같은 대체 여행지의 확보를 추구함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의 관광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조아라 논문은 다른 논문이 다루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1년간의 한일 관광 교류의 수축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이 그 위에 중첩하여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한일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현황 보고 및 향후의 전망에 그친 점은 아쉽다.

앞의 논문들이 개별 산업에서의 한일 관계를 논한 것임에 대해, 류상운 논문은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동아시아의 분업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의 분할’(fragmentation)과 ‘업무의 국제 분업 및 교역’(trade in tasks)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가 1990년대 이후 진행됨에 따라 동아시아 4국(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간의 중간재 교역이 크게 활발해지고 생산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지만, 2010년대 후반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새로운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의 국제분업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일본의 공급 중심지 역할이 약화되고 중국이 수요, 공급 모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의 특정 부문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수요에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2019년 여름 발생한 한일 간 마찰이 일본 정부가 기대하던 대로 귀결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이러한 의존 관계가 있었다.

셋째, 분업구조는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전자산업에서의 중간재 교역이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수송장비산업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앞의 산업별로 분석한 논문과 관련해서 보면, 김양희 논문이 강조한 반도체 산업에서의 한일 양국의 상호의존성은 전기전자산업에서의 중간재교역의 높은 비중 내지 특정 부문에서의 일본의 한국 수요 의존이란 점과 조응한다. 한편 여인만 논문이 자동차산업에서의 한일 간 경쟁을 강조한 것은 수송장비산업에서의 국제분업정도가 전기전자산업부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베 논문이 대상으로 한 철강산업과 같은 소재산업의 국제분업구조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한편, 류상윤 논문은 다른 논문이 다루지 못한 최근의 보호주의경향, 미 중 갈등 문제 및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이른바 ‘느린 세계화’(slowbalization)의 흐름 속에서 국제 수출기지로서의 중국 역할의 감소 및 역외 밸류 체인의 중요성 증대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문들이 산업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를 논한 것이라면, 유혁수 논문은 국제무역체제 속에서의 한일 관계를 특히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이 기여하는 바의 하나는 한국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제무역체제의 변화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종래 일본은 GATT 협정상의 법적 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우선하였으나, WTO 체제 출범 이후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점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WTO를 축으로 한 다자간주의에서 FTA 병행 노선으로의 전환이다. 한국 또한 일본과 유사하게 WTO의 규범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FTA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저자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WTO 설립 이후 회원국으로서 손색없는 존재감을 발휘해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맹국으로서 WTO 운영 특히 룰의 제정 및 해석 적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을 WTO의 규범에 따라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저자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양국 간의 FTA 체결이 좌절되고, 최근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무역질서 안에서의 한일 관계에서도 파열음이 일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최근의 TPP나 RCEP와 같은 메가 FTA의 발족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WTO가 체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복구하고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메가 FTA 간의 건전하

고 협조적인 공존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제가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지워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산화’ 담론 구조를 분석한 최형섭 논문은 현재의 한일 관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의식은 현 시점의 한일 관계에서 촉발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에서 “다시는 일본의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대통령 발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자립’의 의지에 주목했다.

일견 당연한 대응으로 보이는 ‘기술 자립’ 또는 ‘국산화’의 의지에 대해 저자는 과연 무엇이 ‘기술 자립’이며 ‘국산화’인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국산화’ 또는 ‘기술 자립’이라는 구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떤 기술을 ‘국산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 역시 역사적으로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국산화’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예로서 경운기와 전기밥솥에서의 ‘국산화’를 검토하였는데, 경운기의 ‘국산화’가 조립의 국산화, 부품의 국산화라면, 전기밥솥의 ‘국산화’는 국내 특허를 확보해 일본 특허를 우회함으로써, 일본에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를 줄이면서도 일본 제품과 유사한 품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국산화’ 개념의 상대성, 자의성을 굳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보여 주는 저자의 일견 ‘한가해’ 보이는 작업이 현재의 한일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서 근본주의적 시각의 위험성을 저자의 예민한 후각이 감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간취되는 완전한 ‘기술 자립’의 의지는 ‘모방에서 혁신으로’라는 선형적 발전 개념을 근저에 깔고 있으나, 저자는 기술발전의 선형적 발전 개념을 부정한다. 기술 도입은 발전도상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모든 기술적 활동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완벽한 기술 자립이란 허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기술이란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볼 때에 일본으로부터의 완벽한 기술 자립

의 추구는 불모의 행위이며, 중요한 것은 시대적 상황과 보유한 기술력에 근거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 논문 외에 일반 논문 두 편을 실었다. 이 중 구민교 논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국제무역규범이란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편집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이번 특집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슈연계 전략이란 차원에서 볼 때 안보와 무역을 연계시킨 전략으로, “연결시킬 수 없거나 엉뚱한 이슈와 연계를 시도”하는 ‘전술적 연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적 연계’는 공동의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력’(상대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근거하게 되는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의존하는 ‘권력’은 한국의 높은 대일 의존성으로부터 나온다. 즉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 후생의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정치적 편익을 획득하고자 한 행위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역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전략은 실패하거나 불안정한 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규범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대해 필자는 한국이 선부른 연계, 특히 무역-안보 연계전략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WTO가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적극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나, 무역과 안보의 연계는 현행 WTO 체제 아래서 아직 그 규범이 모호하고 느슨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법률전(legal warfare 또는 lawfare)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사실 및 법리 입증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WTO에서 상품무역 관련 규범을 관할하는 GATT 제21조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의문점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무역-안보 연계전략을 일본이 왜 2019년 시점에서 들고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특집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분업구조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부분적으로는 일본이 한국 수

요에 의존하는 구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의존은 과거에 비해 한국에게 치명적 약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의존성을 무기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 갈등의 압력이 크기 때문이라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 하나의 일반 논문인 정지희 논문은 전간기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의 언설을 분석하고 행적을 추적하여,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전파 공론장’의 존재는 신화일 뿐, 당시의 실제 상황과 거리가 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전파 공론장’ 신화에서는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의 쌍방향 송수신 행위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유권’(自由圈)으로서 ‘공중전파대’(空中電波帶)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아마추어 무선가는 개인의 실현과 자유에 가치를 두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며 국가에 의한 통합의 구심력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존재로서 표상된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아마추어 무선가들에게 경쟁적인 과학 내셔널리즘이 만연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라디오 상용화를 목표로 군·관 및 정규 방송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었다. 아마추어 무선가는 국가나 제국과 관계없는, 또는 그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와 제국의 질서를 내면화한 존재였다.

저자는 ‘전파 공론장’ 신화가 등장한 이유를 전후 민주주의의 원형을 일본사의 내재적 발전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전간기의 개인·사회를 국가의 대립항으로 전제하는 시각이 형성된 점에서 찾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아마추어 무선가는 전간기 일본에 등장했으나 전시 체제가 압살해 버린 자유주의 공론장의 맹아, 즉 일본 민주주의 발전의 ‘빼앗긴 기회’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서 국가에 ‘전체주의’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자유로운 개인의 대극에 위치시키는 냉전 자유주의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전파 공론장’이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면, 전간기의 개인·사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의 활동은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와는 무연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

은 막연하다.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의 사고방식과 존재 양태를 파시스트적 전시기와의 대비에서가 아니라 전간기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 안에 온전히 위치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작 전간기가 어떤 시대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최형섭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자립’에 대한 근본주의적 시각과 연관되는 듯하여 흥미롭다. 완벽한 기술자립 또는 국산화의 지향 자체가 국민국가 및 국민국가 사이의 우열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일 경제관계의 전망

이 글의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특집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2020년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된 2개의 리스크, 즉 정치적 리스크와 글로벌 라이제이션의 후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특집의 의도는 절반만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제는 가능성이 아닌 상수로서 존재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정면에서 다룬 논문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특집 기획은 실패다. 그러나 특집 논문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자평해 본다.

특집 논문에서 드러난 리스크 관리의 방향성이란 결국 대일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 한일 경제관계에서 항상 논의되어 오던 것이다. 다만,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을 도외시한 완벽한 기술자립이나 국산화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해외 일본 법인을 포함한 공급선 및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 이슈와 연결시키는 것은 피해야 하며 양국 간의 교역을 둘러싼 분쟁은 국제무역체제 안에서 국제무역규범에 따라 해결을 모색

해야 한다. 이 또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한일 경제관계에 드리워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한일 경제관계의 모습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새로운 점을 지적한 것은 이번 특집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일 양국의 경제는 글로벌한 가치사슬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양국 간의 분업구조는 수직적 분업체제에서 수평적 분업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이번 특집에서 새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이러한 양국 간의 분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는 제한적인 성과밖에는 올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높은 대일의존도를 무기로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 일본의 전략은, 한국 기업의 해외 일본 법인을 포함한 공급선의 다변화 전략과 일본 기업 또한 한국 기업의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지만, 양국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켰다. 한국은 일시적 공급차질과 공급선 변화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일본 또한 한국 수요를 상실함에 따라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 면에서의 GVC를 교란시킴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킨 선례가 되었다.

셋째, 한일 간 분업구조가 전체적으로 수평적 분업체제로 변화하는 가운데 산업별로는 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집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기전자산업이 수송장비산업보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깊이 얽혀 있으며 자동차산업에서 한일 기업의 경쟁이 반도체산업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이런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철강산업에서도 한일 기업 간의 협조보다 경쟁이 부각되는 것도 소재산업으로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산업별로 한일 관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국제분업구조의 특징을 유형화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

고 있다. 한일 양 기업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부문과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한일 국가가 개재할 공간은 많지 않다. ‘대일 의존’이란 해묵은 숙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산업부문에서 한일 기업이 어떠한 협조 또는 경쟁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편집자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테마였으나, 특집 논문이 경쟁 상황에 이르는 과정의 검토에 그치고, 향후의 양국 기업 관계의 전개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그렇다면 향후 한일 경제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아마도 양국 모두 2개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 움직임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관계에 언제든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공급선 및 수요처를 다양화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양국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양국의 경제관계는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를 희생하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변화의 속도를 컨트롤하는 능력, 가능한 한 경제적 후생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양국의 정부, 기업에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또 예상을 뛰어넘는 매그니튜드로써 경제관계를 교란할 수 있다. 정치적 리스크를 경제적인 면에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양국의 정치적 갈등을 직접 풀어 나가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